



건설협회 도회 운영위 개최 대한건설협회 도회(도회장:오인철)는 26일 도회 회의실에서 2018년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갖고 각종 건설업계 현안을 논의했다.



오인철
대한건설
협회
강원도
회장은

27일 오전 10시30
분 서울 대한건설
회관에서 열리는
건설공제조합 정기
총회에 참석한다.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 1차 운영위원회 대한 건설협회 강원도회 (회장 오인철)는 26일 도회 회의실에서 제 1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회계연도 결산과 올해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했다.

쫓그라든 SOC예산... 내년에도 '삭풍'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정부의 SOC(사회기반시설) 예산이 큰 폭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일자리와 혁신성장 등에 대한 확장적 재정 투자는 유지하면서도 도시재생이나 안전 분야를 제외한 SOC는 신규 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완공 위주로만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9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안)'을 확정했다. 이 지침은 각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때 준용해야 하는 가이드라인이다.

기획재정부는 5월 말까지 각 기관의 예산요구서를 제출받아 8월 말 정부안을 마련해 9월 초 국회에

2019 예산안 편성지침 확정... '일자리 창출·혁신성장·안전' 초점 신규 억제, 완공위주 투자... 올해보다 10% 줄어든 17조 안팎 전망

제출할 예정이다. ▶관련기사2면
지침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확장적인 재정운용에 나서기로 했다. 청년일자리 및 저출산·고령화 대응, 혁신성장, 안전 등을 4대 투자중점으로 설정해 당초 중기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했던 453조3000억원을 훌쩍 넘는 예산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그러나 SOC 분야는 그동안 스톱이 상당히 축적됐다고 보고 내년에도 투자 효율화 및 지출 구조 조정에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기존시설 개량 및 연계, 선

형 개선 등을 통해 도로와 철도 등 신규 노선은 최대한 억제한다는 계획이다. 또 신기술·신공법 등을 통해 원가 및 유지보수비 등을 절감하는 지출 효율화 방안을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따라서 내년도 SOC 예산안은 올해(19조원) 대비 최소 10% 이상 줄어든 17조원 안팎에 그칠 것으로 관측된다. '중기 재정운용계획'에도 내년도 SOC 예산은 17조원으로 제시된 바 있다.

정부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취업 및 창업, 교육, 주거 등 일

자리패키지 투자 지원을 크게 늘리기로 했다. 또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해 모든 재정사업을 재검토해 효과가 높은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혁신성장 분야도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R&D 투자를 늘리고, 드론과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등 핵심 선도사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여기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향상을 위해 국가 안전대진단 등 안전점검을 내실화하고 위험시설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안전 인증제 도입 등을 통해 취약시설 관리 및 사고 예방을 위한 투자를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봉승권기자 skbond@

SOC예산 축소·주택시장 침체 여파

건설공사 계약액, 갈수록 내리막길

지난해 209.9兆로 2% 감소
올해도 감소폭 더 확대될 듯

건설공사 계약액이 하락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SOC(사회기반시설) 예산 축소와 주택시장 규제 여파 등의 골레에서 벗어나지 못할 경우 올해 200조원선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건설공사 계약액은 209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0% 감소했다.

건설공사 계약액은 지난 2014년 154조2000억원을 기록한 이후 2015년 207조2000억원으로 34.3% 증가하고선 2016년 214조3000억원으로 3.4% 늘어나며 증가폭이 둔화되더니 작년 들어 결국 감소세로 돌아섰다.

주체별로 보면 공공이 49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7.8% 증가했지만 민간이 4.7%(160조3000억원) 감소한 부분을 매우 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공종별로는 토목과 건축이 각각 48조8000억원, 161조1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5.9%, 0.8% 줄었다.

기업 규모별로는 상위 1~50위, 51~100위, 301~1000위 기업의 계약액이 감소한 반면 101~300위, 1000위 미만 기업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50위 기업의 경우 86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2% 감소했고, 51~100위

와 301~1000위 기업은 각각 14조9000억원, 19조3000억원으로 6.4%, 1.9% 축소됐다.

101~300위는 계약액이 19조1000억원으로 3.0%, 1000위 미만 기업은 70조1000억원으로 4.7% 확대됐다.

현장 소재지별로 보면 수도권이 전년 대비 1.1% 증가한 100조5000억원을 기록한 반면 비수도권은 4.8% 감소한 109조5000억원이었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올해 건설공사 계약액의 감소폭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우려된다.

SOC 예산이 축소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데다 규제 일변도의 주택정책으로 민간 주택의 경기도 좀처럼 살아나기 힘들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건설공사 계약액은 2016년 정점을 찍고 지난해 하락세로 전환한 뒤 올해는 더 가파른 하락 곡선을 그릴 것으로 본다"며 "최악의 경우 올해 건설공사 계약액이 4년 만에 100조원대로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건설공사 계약액 통계는 건설산업 종합정보망(KISCON)에 통보된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계약한 1억원 이상 원도급공사를 집계한 것으로, 전년 건설업조사 기성액 기준상위 54%의 종합건설업체를 모집단으로 하는 통계청의 건설수주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박경남기자 knp@

SOC '고용영향평가' 연내 시행... 등급 낮은 사업 투자 줄인다

재정지출 구조조정 1순위 'SOC'

예타도 개선... 인구구조 변화 반영
"예산 낭비 방지, 투자 효율성 제고"

자율주행차 등 혁신성장 관련사업
노후시설 개선·도시재생 집중 투자

이르면 올해 중 대규모 SOC에 고용영향평가기 시행되고 인구구조 변화 및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예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정부는 내년에도 확장적인 재정투자 기조를 유지하되, 일자리 중심 투자 및 예산 낭비 방지 등 투자 효율화를 위한 지출구조조정은 병행하기로 했다.

구조조정은 양적인 대규모 삭감보다는 질적 효율성 제고에 방점을 두기로 했다. 내년에도 구조조정 대상 1순위는 SOC를 지목했다. 따라서 SOC 예산은 올해 전년 대비 20% 삭감에 이어 내년에도 투자액이 20% 이상 감소가 불가피해 보인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올해는 질적인 구조조정에 중점을 두겠지만 내부적으로는 목표를 갖고 양적 구조조정도 단행할 것"이라며 "특히 SOC는 지역적으로 요구가 많을 것으로 보이나 가능한 완공 위주, 중점투자사업 위주로만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르면 SOC 분야의 투자중점은 완공 위주 투자다. 전년 이월 및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한 투자 효율화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지출 효율화 방안으로 불필요한 고규격·과잉설계 방지를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이를 통해 고난이도·고부가가치 기술적용 확산 및 일자리 창출에 투자하기로 했다. 또 신기술 및 신공법을 활용해 원가 및 유지·보수비를 절감하고 기존 시설개량 및 연계, 선형개선 등을 통해 신규노선은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출퇴근 시간 단축 등을 위해 대도시권 순환도로 및 수도권 광역철도 등에 지속 투자하면서도 신규 인프라 건설보다는 도로와 철도 등 기존 교통망의 네트워크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이르면 연내 고용영향평가 대상에 SOC 사업을 추가할 방침이다. SOC 추진에 따른 지역 고용률이나 고용유지율 등을 평가해 등급(A~E)을 부여하고, 등급이 낮은 사업은 구조조정을 통해 투자 축소 등 효율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일정규모 이상의 SOC 사업에 대한 예타에 인구구조 변화양상을 반영, 평가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경제성 평가뿐 아니라, 저출산·고령화를 비롯해 생산가능인구 및 지역별 인구증감현황에 따른 수요 변화를 평가에 반영해 예산낭비를 막고 투자 효율성을 높여겠다는 것이다.

구윤철 예산실장은 "앞으로 대규모 건설사업을 추진하려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수요증가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예타에서도 경제성뿐 아니라 인구사회까지 등 구조적인 변화를 평가하도록 제도 개편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SOC 구조조정과는 별개로, 스마트시티와 자율주행차 등 혁신성장 관련 투자와 노후 SOC 기능 개선, 내진보강, 치수능력 증대 등 안전분야 투자를 계속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역주행 방지 및 빅데이터 활용 지능형교통시스템, 첨단안전장비 확대 등 교통안전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자진, 홍수, 가뭄 등에 대비한 SOC 내진보강 및 댐 치수능력 증대, 용수공급사업 등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혁신성장 관련 SOC와 노후 도심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도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또 자율주행차 상용화 및 드론 안전기반 구축, 스마트시티 조성·확산 등 선도사업에 대한 투자를 늘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고 전국적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 고부가가치 기술 및 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산업단지, 첨단산업에 필요한 방식으로 전환해 나가기로 했다.

이중 청년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신단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복지 및 주거, 문화시설 등을 연계 개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봉승권기자 skbong@**

내년 '453兆 + α' 슈퍼 예산

청년일자리·복지·안전, 대폭 증액... 경기침체지역 지원 확대

한 해 예산이 400조원(추경 제외)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2년 만에 내년에는 453조원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슈퍼예산'이 편성될 전망이다.

정부는 26일 확정된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안)'을 통해 내년에는 당초 중기재정 계획상 지출규모 증가율(5.7%)을 상회하는 수준의 확장적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중기재정 계획상 내년도 예산은 453조 3000억원이었으나, 일자리 문제 해결 및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 재정의 역할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올해 지출증가율 7.1%를 넘어서 460조원이 넘는 예산안이 편성될 것이라 관측해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오는 8월쯤 돼야 올 해 및 내년도 세수에 대한 구체적인 윤곽

이 드러나겠지만 재정지출은 당초 계획(5.7% 이상 늘릴 것)이라며 "특히 청년일자리와 안전 등 국민 삶의 질(복지), 사회적 가치제고 사업에 대한 투자는 획기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요지출 12개 분야별 보편 일자리를 포함한 복지분야와 R&D, 국방, 외교·통일, 일반·지방행정, 안전분야 예산이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일자리 예산은 앞으로 3~4년 내 취업시장에 진입한 예고세대를 겨냥해 청년층의 소득 및 주거, 자선형성 등 직접지원 규모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분야는 저출산 추세 전환을 위한 돌봄 사각지대 해소 등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조성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로 했다.

안전분야는 재해, 재난예방을 위한 투자를 늘리고 환경분야와 연계해 미세먼지 저감 등 생활환경 안전사업에 집중할 계획

이다. 단 환경기초시설 등 인프라 투자기조는 신설에서 유지보수로 전환, SOC와 마찬가지로 신규 투자를 억제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방행정 및 국민참여 예산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먼저 군산, 통영 등 각종 산업구조조정으로 인해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지역대책 지원을 확대하고 지방재정 분권 강화를 위한 예산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또 지역특화산업육성 및 지역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해서는 국가균형발전회계를 통해 국고지원을 늘리고 R&D 분야와 연계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지역산업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밖에 기회균등과 사회통합, 약자 배려 등 사회적 가치 제고사업에 대한 예산투자를 늘리고 지난해 시범적으로 도입한 국민참여예산도 대폭 증액하기로 했다. **봉승권기자**

2017 회계연도 국가결산

세수 증가로 나라살림은 풍족해졌지만 부채·실업률 증가 등 서민삶은 팍팍해져

지난해 경기회복과 세수 증가로 나라살림은 눈에 띄게 풍족해진 반면, 가계부채와 실업자 수는 계속 증가하는 등 서민 삶은 더 팍팍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2017회계연도 국가결산'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지난해 총세입은 359조5000억원, 총세출은 342조9000억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6조2000억원에 달했다. 이중 차년도 이월금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11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경기호조에 따른 국제수입 증가 등으로 정부의 세계잉여금은 2015년 2조8000억원에서 2년 만에 4배 이상 늘었다.

이에 따라 정부 재정수지도 GDP 대비 0.3~0.4%포인트 개선됐다. 통합재정수

지는 24조원 흑자를 기록했고 관리재정수지는 18조5000억원 적자였으나 적자 폭이 크게 줄었다.

국가채무도 660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3조8000억원 늘었으나, 증가 규모는 2013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처럼 정부 살림살이는 풍족해졌지만, 가계는 달랐다.

지난해 말 기준 가계부채는 1450조 9000억원(잠점)으로 1년 전보다 108조 4000억원이나 늘었다. 2002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다.

11조원이 넘는 추경(추가경정예산)과 각종 일자리 대책에도 일자리 사정은 더 나빠졌다. 지난해 실업자 수는 102만 3000명으로 2000년 집계 이후 최고 수준



가 기록됐다. 일당월도 2010년보다 3.7%를 기록하며, 2001년 4.0% 이후 최고치를 이어갔다.

지난해 국가부채는 세수 호조에 불구하고, 사상 처음 155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집계됐다.

공무원 및 군인연금 충당부채가 역대 최대로 늘었기 때문이다. **봉승권기자**